

여·야·정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구난방'

일 양에 따라 근로시간 조율...與 "3개월→6개월 고려" 한국당 "1년"·고용부 "반대"...주52시간 보완책 제각각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책으로 주목받는 탄력 근로 확대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과 정부가 2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력근로제도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현재는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IT)이나 건설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정차권의 입장도 엇갈린다. 당장 정책 결정을 놓고 한 배를 타야 하는 당정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확대에 찬성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간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및 대한상의 방문시 탄력근로제도와 관련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반적으로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면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홍 원내대표의 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탄력근로

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 근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적용하기 어려우니 2022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고 여야가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면서 "홍 원내대표나 김영주 장관이나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단위 기간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한다. 바른미래당은 당장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요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신보라·추경호 의원 등이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생산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전망된다. /연합뉴스



추미애 "남북 철도사업, 평화 앞당길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잇고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면 평화의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할 땐 언제고... 한국당·바른미래 "개헌 하자"

개헌 명분 정국 주도권 잡기... 개혁입법연대 구축 견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일 '개헌 카드'를 꺼내놓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관계 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이던 여당이 이제 지명선거도 끝나 국민개헌을 추진할 시점에 주목부담으로 일관해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세 그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29일에도 "현재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 논의, 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 3당 공동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만약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야당이 이처럼 개헌 불씨를 다시 당긴 것은 6·13 지방선거 참패로 잃어가는 존재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개헌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민주당·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의 개혁입법연대 구축 조짐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입법연대에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할 경우, 신속처리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의석을 넘

어 한국당으로선 '패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개헌을 고리로 바른미래당을 보수야권에 붙잡아 둔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이 개헌과 아울러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군소정당인 평화당·정의당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이날도 야권의 개헌 공조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대행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에 매몰되지 않겠다.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에 통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가 권력 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과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 손금주·이용호 영입하나

강길부 의원까지... "공식 논의된 바 없다"

평화당 "영입시 연대 재고"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이용호·손금주·강길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으로서 지방선거 압승 후 더욱 세를 불려 주도권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당내의 반발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해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박범계 대변인은 2일 이들 세 의원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들 의원의 영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재보궐 승리를 충분한 의식을 확보했고 당 지지율도 높다"며 "3석을 더 확보해도 다당제 구도를 흔들 수 없는데 영입이 절실하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3인방'의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다. 당이 어려울 때는 외면하다 인기가 높아지니 총선을 노리고 복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

장이다. 특히 이들 의원이 속한 지역구의 원외위원장들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울산에서 민주당 세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입을 받기는 경우도 일부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평화당까지 반발하는 점이 당 지도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평화당 조배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의원 3명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미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의원영입 시도를 계속한다면 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와 민주당과의 협력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평화당의 이 같은 반응은 아·손 의원이 호남 의원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들의 민주당 합류가 평화당 내 호남 출신 의원 및 당원들의 도미노 이탈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평화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전대 투표방식 갈등

1표제·2표제 기싸움... 여론조사 반영 놓고도 분분

내달 5일로 예정된 민주당 평화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 선출규정을 둘러싼 기싸움이 팽팽하다.

창당 후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 투표방식을 당원 1명당 1표(한 사람의 투표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로 하자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유성엽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평화당에 따르면 정인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다음날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투표방식 등 몇몇 세부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정의원이 1인 2표제(두 명의 후보를 선택, 연기평)가 가진 '중의 왜곡'의 맹점을 거론하며 1표제를 주장하고, 이에 다른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합의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원 측은 이날 "4명 밖에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2표제로 갈 경우 합종연횡, 즉 짝짓기 가능성이 있다"며 "당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돼야 하는데 2표제 아래에선 순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반면 유성엽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집단지도체제 방식에선 2표제가 관행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표제에 반대하는 한 후보 측은 "1인 1표를 하게 되면 1~2등 아니면 변별력이 없어진다. 몇몇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최고위원이 되면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또 인지도 있는 사람에게 표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반영 여부를 놓고도 후보들 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원은 국민 여론조사를 전당대회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후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지율이 1.5%에 그친 평화당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준위 핵심관계자는 "당헌에 국민참여단 선거와 여론조사는 2가지 방식이 있다"며 "3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